

정부 노력에도 농가 주머니사정 껍뻑

직불금 제도 문제점 제기 영세농 소득 안정책 요구 최저 생계유지 보장 절실



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비를 해 보면 2007년 소득격차는 1,191만원이 었지만, 10년 만에 소득 격차는 2,142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

다. 즉, 정부는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농정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농가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7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을 보면, 축산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이 평균 소득(3,824만원)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고 특히 논벼 작물 농가는 평균소득 대비 28% 적게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중회 의원은 "벼 재배농가 중에서 경지면적 0.5ha 미만 농가들은 벼 재배 농가의 35%(13만 9,748가구)를 차지하지만, 2017년 1인당 고정직불

금 27만 3334만원과 변동직불금 1인당 21만 8488만원을 수령해 연간 총 49만 1822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 농가 생산비를 보면 전국 평균 69만원(10a) 대비 14만원이 더 비싼 83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시근로자 대비 수입이 낮은 농가 중에서도 영세 벼 재배 농가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2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선수 선발에 어떠한 비리도 없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소득 높을수록 더 많이 숨긴다

유성엽, 고소득사업자 경우 소득금액의 절반이상 탈세



년도에 비해 소득적출률이 감소했다. 50억 이하와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들은 오히려 소득적출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16년 12.8%에서 17년 29.8%로 2배이상 뛰어 소득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세청이 최근 3년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소득적출률 43%, 2016년 43%, 2017년 51.6%로 탈세율이 증가, 금액 또한 각각 6059억, 6330억, 6719억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감추었던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탈루가 많다는 것은 탈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양극화 감소 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세금탈루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일수록 탈세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무·교창, 민주평화당·사진)이 국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나온 소득적출률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전 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신고금액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 소득금액 중 적출된 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을 많이 숨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힌 개인사업자 소득적출률을 수입금액 별로 구분해 본 결과, 5억 이하와 10억 이하 사업자들은 이전해인 2016

불량비료 유기농자재 둔갑 유통

농진청 안일한 대응 탓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유기농자재로 둔갑돼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원주(천안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한다. 지난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2017년 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비료의 품질검사와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각각 농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한다. 농진청은 그러나 단순한 불량비료를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아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가 6개 품목 총43.7t이며 이 중 3개 품목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농진청과 농관원의 업무협조 미흡을 꼽았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단속 후 이를 농관원에 제공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저유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희생양" 비판

여야 의원, 최준성 대한승유관공사 사장 증인 출석 요청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고와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졸속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준성 대한승유관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0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를 (화재)원인으로 지명한 건 조급한 졸속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바람과 풍등을 구속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속 영장도 반려했다. 무슨 이런 참피한 일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일개 불씨로 파기됐다. 근본 원인이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인가, 아니면 안전장치 관리의 문제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풍등을 원인으로 볼 것이지, 유전기가 쉽게 다른 화기에 노출된 게 원인인지 등을 살펴 보겠다"며 "전국의 대형 정유 시설에 대해 일제 시설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민방위 교육 5년간 불참자 17만3222명 달해

민방위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민방위 관 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으로 분석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었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19199명, 2014년 3만2322명, 2015년 3만5793명, 2016년 3만1459명, 지난해 4만4449명으로 2016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떠나자
맑은 물과 푸른숲이 있는 순창 강천산으로...

강천산 계곡

강천산 병풍목포

메타세콰이아길

장군목

순창의 참종다(도)
제13회 순창장류축제
2018. 10. 19(토) ~ 21(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